

【 종합 】

‘무전유죄·유전무죄’ 재판·수사 질타

■ 광주 고·지법, 광주 고·지검 국감현장

여야, ‘鄭 추가조작 의혹’ ‘李 의혹 덮기’ 설전

19일 열린 광주 고법·지법과 광주 고검·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법원과 검찰의 ‘무전유죄·유전무죄’ 재판·수사 관행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다.

또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처남 동원 추가조작 의혹을 놓고 한때 여·야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전유죄·유전무죄’=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회지도층인 국립대 대학교수들은 수 천만원~1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학위를 팔았음에도 실형은 커녕 2심에서 선고유예라는 면죄부 판결을 받고 교수직을 유지했지만, 77만원을 생활비로 쓰기 위해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이나 택시 운전전혀를 부정 발급받은 피고인에게는 각각 실형이 선고되는 게 현실”이라며 법원을 비판

했다.

노 의원은 이어 “크게 횡령한 사회지도층은 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로 풀려나고 소액 횡령한 힘없는 서민들은 실형을 사는 사법현실 앞에서 서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신당 문병호 의원은 “보석허가 청구 사건과 관련, 광주지법의 경우 2006년 변호인이 있는 경우 54.8%·변호인이 없는 경우 56.7%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올 들어 변호인 51.6%와 39.1%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허가를

이 크게 차이가 나면, 상대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서민들은 신체 구속을 있어 불명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추가조작 의혹’ 공방=이날 광주고법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처남동원 추가조작 의혹을 다시 꺼내면서 한때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 후보의 추가조작 의혹은 오후에 열린 광주 고등·지방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일관된 의혹을 제기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국감”, “이명박 의혹 덮기”로 맞섰다.

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뒤 “관련자 중 단 1명만 기소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시체차이이 15억원에 달해 엄중 처벌이 필요한 데도 전주지법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원만을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의 문병호 의원이 “기소권은 검찰업무이지 법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긴급 의사진행 발언으로 맞섰다.

정 후보의 추가조작 의혹은 오후에 열린 광주 고등·지방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일관된 의혹을 제기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 국감”, “이명박 의혹 덮기”로 맞섰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국민 뜻대로 대연합 준비해야” DJ, 鄭에 개인레슨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19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에게 ‘개인 수업’을 단단히 받았다.

당선 인사사 김대중 도서관으로 DJ를 예방한 자리에서다.

김 전 대통령은 1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국민이 바라는 바를 받들어 국민의 뜻대로 대연합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연합이든, 통합이든 대통합결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잘 이해를 못하면 설득하고 국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모든 것은 국민의 뜻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신당 대선기획단 최재천 대변인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신당 대선후보 경선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데 대해서도 “단 한명도 불복하거나 뛰쳐나간 사람이 없었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경선이나”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신당 내에서는 자신이 역설해 온 대통합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경선을 통해서도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정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개인레슨에 가까울 정도로 선거운동 등 본선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무슨 정책을 얘기할 때 짚어줘야 하는 게 좋다. 너무 많이 한다고 할 정도로 해야 국민 머리에 남아 투표로 연결된다. 이것이 선거운동 선전을 위한 요결”이라고 ‘코치’했다.

그러면서 1984년 미국 대선 때 레이건-덴틀 후보간 경쟁 일화를 꺼냈다. 그는 “만데일은 매일 화려한 정책을 발표하니 언론들이 매번 대서특필했고, 레이건은 감세, 기업 활동 자유화 등 한두가지만 되풀이하니 거기자들이 ‘그것 밖에 없느냐’고 했지만 레이건의 대응으로 끝났다”며 “레이건이 말한 것은 머리에 남는 데 만데일이 말한 것은 하도 많아 잘 모르겠다는 게 유권자들의 실명이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 인물 김동철 통합신당 의원 “형사조정제도 모범 운영...조정위원 확충을”

대통합민주신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은 19일 국회 법사위 광주국감장에서 ‘질책’만 쏟아내는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법원과 검찰의 우수 시책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지법에 대한 질의에서 “광주지법이 올해 상반기 민원업무 우수법

원으로 선정돼 광주출신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됐다”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노약자의 보호자 동석 증인 등 민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려는 작은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법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김 의원은 또 “광주지검은 검찰이 올해 초



전국적으로 도입해 호평을 받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전국 검찰청 중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운영해 검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한 뒤 “향후 조정위원 확충 등을 통한 제도의 확대 시행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광주지검의 공무원 범죄에 대한 낮은 기소율과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하기도 했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대선 매니페스토 실천 결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7대 대선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회에 참석한 김기수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 한영 한나라당 최고위원, 류동훈 광주시선관위 상임위원, 임호준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시당위원장, 최경주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용채 광주경찰서 대표(왼쪽부터) 등이 결의문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이인제 “호남과 충청은 일체”

권영길 후보, 이수성 前 총리 등 광주·전남 찾아

이인제 민주당 후보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이수성 전 총리 등 대선 예비후보들이 19일 잇따라 광주·전남을 찾아 호남 겨간기에 나섰다.

이인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호남과 충청은 연합이 아니라 일체로 다시 태어나 강력한 서부벨트 축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중순까지 광주·전남에서 단일후보의 향방을 결정지어달라. 한나라당 후보와 싸워 이길 대안세력으로 민주당 후보를 집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나주~무안~목포를 잇는 자식기반 신경제특구 건설, 신산업 동력 확충을 위한 광산업과 첨단부품·디자

인 산업 육성 등 지역현안 공약을 제시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이날 민노당 순천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선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와 사회양극화 체제를 청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날 순천 황전면에서 농민들과 비베기를 하는 등 농심(農心)을 잡기 위한 지역 민생투어에 돌입했다.

지난 11일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연대’ 발족식을 갖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수성 전 총리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늙은 정치판을 갈아엎고 화합과 도약을 위한 국민행렬을 이루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시설

1천만 넘는 수도권 집중 반대 서명운동

수도권 집중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참여자가 1천만 명을 넘었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는 지난 7월 하순부터 9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1천119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비수도권이 특정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서명운동은 목표 1천만명을 초과 달성했다. 광주 56만3천명, 전남 76만9천명 등 서명자 1천119만명은 비수도권 인구 2천528만명의 44.2% 수준이다. 지역균형발전전에 대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의지로 평가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하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4%, 생산기능의 60%, 경제·사회·문화 중추기능의 80%가 몰려 있다. 이런 상태에선 국가균형발전은 헛구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도권 시·도와 일부 정치권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돼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총량 규제가 없어지고 대규모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지역균형발전협의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발, 11월2일 서울역광장에서 국가균형발전 촉구 1천만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을 종합한 서명부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한다.

비수도권은 서명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총력 대응하길 바란다. 수도권의 각종 규제가 풀리면 지방은 고사하게 된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 표를 의식해 이 문제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사태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조선대 정이사 체제 전환 빠를수록 좋다

호남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19년간의 임시(관선)이사 체제를 접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조선대 정상화 추진위’는 지난 18일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 임

가지의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됐다며 하루빨리 정이사 체제로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도 정이사 체제 전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학내 구성원 간의 합의다. 학교법인과 대학본부, 총학생회, 직원, 총동문회 등 각 구성원들이 정이사 체제 전환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구성원들은 학교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선대는 장기간의 임시이사 체제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주인 없는 학교’이다 보니 학과 폐합 등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자율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특히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인 투자 등으로 대학 경쟁력에서 날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조선대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비민주적이며 독선적인 학교운영, 공금유용 등 40

가지의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됐다며 하루빨리 정이사 체제로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도 정이사 체제 전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학내 구성원 간의 합의다. 학교법인과 대학본부, 총학생회, 직원, 총동문회 등 각 구성원들이 정이사 체제 전환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구성원들은 학교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국내 대학은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 이런 무한 경쟁시대에 임시이사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살아남을 대학은 없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하루빨리 정이사 체제 전환을 통한 학교발전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승조 중장 등 軍장성 106명 인사

국방부는 19일 장성 106명에 대한 정기간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정승조(육사32기), 이철휘(학군13기) 소장이 중장 진급과 동시에 군단장에 보임됐다. 육사 32기의 군단장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승조 중장은 남북 정상급군사회담 수석대표를 맡고 있으며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군장관회담 대표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사령관이 2년 임기의 소장으로 진급했으며 박찬석(해사35기) 대령 등 13명이 준장으로 승진했다. 공군 오창환(52.공사25기) 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이 준장으로 진급해 공군참모총장을 맡게됐다. /연합뉴스

靑 사회조정비서관 이형석씨

청와대는 19일 사의를 표명한 김충환 업무혁신비서관 후임에 민기영(여·39) 업무혁신비서관실 행정관을, 김영배 행사기획비서관 후임에 이정민(39)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을 승진 발표했다.

함께 사의를 표명한 송인배 사회조정2비서관 후임에 조승래(39) 시민사회비서관실 행정관을 승진시키고, 민형배 사회조정3비서관 후임에는 이형석(46)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내정했다. 사의를 표명한 비서관들은 대부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동주 모아주택산업 회장 ‘덕산’ 신임대표 취임

한동주(61) (주)모아주택산업 회장이 사회복지법인 ‘덕산’의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덕산은 19일 담양군 금성면 복지법인 강당에서 대표이사 및 임원 이·취임식을 갖고 한 대표이사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취임사에서 “지난날 법인의 일들을 거울삼아 더욱 투명하게 법인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3천400여명의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재활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www.kwangju.co.kr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홍보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의만평

- 김중두



아주 못 일어나게 한방 더~?!

부토 노린 폭탄테러 120여명 사망

〈파키스탄 前총리〉

250여명 부상, 부토는 무사...탈레반 등 배후 가능성

8년간의 망명생활을 마감한 베나지르 부토(54) 전 파키스탄 총리의 귀국길이 탈레반의 경고대로 결국 피로 일룩졌다.

18일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날 자정께 파키스탄 남부의 카라치 시내에서 부토 전 총리를 태운 차량 행렬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차량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부토 전 총리의 축하행렬에 동참했던 인과 중 최소 120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부토 전 총리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각 카라치 시내에서 부토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파키스탄 인민당(PPP) 고위 당직자들을 태운 트럭 행렬 근처에서 2건의 차량 폭발이 발생했다.

폭탄이 폭발하면서 부토의 귀국 축하 행렬에 동

참했던 PPP 당원과 시민, 경찰 등 최소 1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상자 집계는 다소 엇갈리고 있다.

파키스탄 내무부는 19일 총 70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 지오(Geo) TV는 이번 사건의 사망자가 최소 130명이며 550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카라치 시내 6개 병원에서 최소 126명이 사망했고 24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축하행렬의 주인공인 부토 전 총리는 안전한 상태라고 자베드 차마 파키스탄 내무부 대변인이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부토의 귀국을 전후해 그를 암살하겠다는 경고가 잇따랐던 점을 감안할 때 파키스탄에서 활동중인 탈레반이나 알-카에다가 사건의 배후 가능성이 높다. /뉴델리=연합뉴스